

보도자료

(농림부)

- 제공일 : 2006. 2. 28.
- 제공자 : 농업·농촌종합대책
점검단 지원반
- 과 장 : 김 성 민
- 사무관 : 이 상 만
- 전 화 : 500-2095

이 자료는 2006년 3월 1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목 : 농업·농촌 종합대책 전면 점검·조정키로
- 연말까지 FTA, DDA협상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보완

- 정부는 지난해 11월 쌀 협상결과에 대한 국회비준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이행상황과 단기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, 한-미 FTA, 도하개발어젠다(DDA) 농업협상에 대응하여 지난 2004년 2월 수립한 농업·농촌종합대책의 전면적인 점검·조정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. 이를 위해 정부는 올 연말까지 농업계와 함께 범부처적으로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- 농림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『농업·농촌 종합대책 점검 및 조정방안』을 2월 2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.
 - 보고서 주요내용은 ① 쌀 협상결과 비준동의과정에서 농업계에 약속한 18개 과제 이행상황 ② 쌀 협상 비준에 따른 후속조치 ③ 전면적인 농업·농촌종합대책 점검·조정방안 등임(붙임 참조)
 - 이번 점검·조정방안은 지난해 쌀 협상결과 국회비준시 농업계와 국회에서 농업·농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청한 데 대하여 정부가 지난 3개월간 농업인단체·전문가·정부내 관계부처와의 협의,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.

□ 농림부는 농업·농촌문제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준 농업인 단체에 고마움을 표하고 향후에도 농업계의 실질적인 정책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며 정책결정과정에서부터 투명한 참여행정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
○ 농림부와 주요 농업인단체는 지난 12월부터 식량, 유통 등 6개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여 지난 3달간 농업계, 지자체 등이 제안한 과제에 대하여 총 27회의 워크숍과 협의회를 진지하게 진행했다. 이를 통해 농업·농촌문제를 155개 과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점검 작업의 기초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.

□ 쌀 협상결과 비준에 따른 후속조치인 쌀, 과수, 축산 중심의 단기보완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쌀협상결과 비준시 약속과제 이행상황 보고

- 쌀협상결과 국회비준동의 과정에서 여·야 합의로 농업계에 약속한 18개 과제 추가지원대책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행중이다.

② 쌀, 과수, 축산 중심의 단기 보완대책 마련

- 쌀 농가의 소득은 보장하고 쌀산업은 시장지향적으로 개선한 양정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되, 제도변경에 따른 가격하락 등 시장반응을 반영하여 양정제도를 보완하였다.

· 2006년산 포대벼 매입 우선지급금은 수확기 이전인 7월에 조기 확정 발표하는 등 공공비축제 보완을 추진

- RPC가 군단위 이상으로 광역화 통합될 수 있도록 RPC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제도 강화
- 쌀 관측제도를 6월까지 도입하는 등 쌀 수급관리제도 보완
-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등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방안을 강구하고 쌀의 품질고급화·브랜드화 지원 강화

- 과수산업 보완대책과 축산업 보완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한다.

- 외국의 유명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과실 대표브랜드 육성 지원
- 과수 분야 품목별 조직을 육성하고, 산지유통센터(APC)를 권역별로 거점화하여 시장개방에 대응
- 성공 가능성 있는 우수 축산물 브랜드 80개 선정, 집중 지원
- 축산물 안전관리 대책 강화(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'08 시행, 돼지 사육단계 HACCP '06 시범도입, 닭·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'07부터 단계적 도입 등)

- 정부는 단기대책에 포함된 과제중 예산이나 조세관련 사항은 중기재정운용계획, '07년 예산편성 작업과 연계하여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.

□ 그리고 3월 이후부터는 DDA 농업협상, 한·미 FTA 협상의 진행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업·농촌종합대책을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연말까지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일정으로 추진하되, DDA·FTA 등의 일정과 연계하여 조정기로 하였다.

- 농업·농촌대책 전반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하며, 참여정부의 기본 농정으로 시행 3년째를 맞는 119조 투융자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·평가하여 투융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.
- 특히, 발전된 국가경제에서의 농업·농촌의 비전과 위치를 재정립하고, 개방확대에 대비하여 도·농 균형발전차원에서 소득정책, 농촌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보완할 것으로 알려졌다.
- 3월 이후 작업을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농림부내 T/F, 관계 부처협의회 등을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, 농업인단체, 학계 등이 참여하는 「(가칭)119조 투융자계획 평가협의회」를 구성하여 그간의 농업분야 투자사업들을 심도 있게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.
- 정부는 농업·농촌문제의 대책논의에 농업계의 실질적 참여가 확대 되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해 나가면서, 이와 별도로 국회·농업계가 합의 하여 3자협의기구가 구성되면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.

농업·농촌종합대책 점검 및 조정방안(요약)

1 추진 경과

◇ 지난해 쌀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정부가 농업·농촌 대책을 재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요청

- 농업·농촌 종합대책 조정 방향·추진체계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림부 차관을 단장으로 농림부내 실무 T/F 구성('05.12.2)
- 주요 농업인단체와 함께 6개 분야 실무협의회 구성, 총 27회에 걸쳐 농업계·지자체 등이 제안한 155개 과제 검토
 - * 쌀협상 비준 당시 단절된 정부와 농업인 단체간 대화채널을 복구하였고, 3월 이후 대책 점검·조정 작업의 기초를 제공했다는 평가
- 대책 점검과정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(4회), 농림부 PCRМ (8만명, 4회) 활용 등 적극적 홍보로 정책 투명성 제고
- 농업인단체(2.22) 및 정부내 관계부처(2.24)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내용 및 방향 협의·조정
- 쌀 협상 비준 후속조치 차원의 대책은 부처간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2월중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
- 3월 이후 DDA 농업협상, 한·미 FTA 등에 대응한 전면적인 농업·농촌 종합대책 조정 추진

- ◇ **쌀협상 비준과정에서의 대농업계 약속사항을 지속 추진하고 수확기 쌀값하락 등의 문제에 대응한 단기 보완대책 추진**

가 쌀협상 비준시 약속 과제

- 쌀협상 결과 비준동의 과정에서 농업계에 약속한 18개 과제 추가지원대책은 모두 정상 이행중
- 공공비축 매입물량 확대(공공비축 400만석, 공공비축외 100만석 추가), 쌀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(60만원/ha→70)
- '01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(5.3조원) 상환기간 연장('05.12.29, '농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' 개정) 및 정책자금 금리인하(1.1 시행)
 - 10%이상 원금상환시 연 3%로 5년 분할상환, 그 외는 3년분할(5%)
 - * '06. 6. 30일까지 분할상환 희망 농업인이 해당 농·축협 등에 신청
 - 농업인 대상자금은 3%(당초 4%), 비농업인은 4%로 인하(4~5.5%)
- 밭농업에 대한 직불제 확충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'06년부터 본사업으로 전국 확대 실시(523억원)
 - * 전국 밭 721천ha의 26%인 187천ha 대상으로 40만원/ha(초지 20만원/ha) 지급
-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('05 : 1,692억원 → '06 : 2,218)

나 품목별 단기 보완대책

(1) 쌀산업 보완대책

□ RPC 신규진입·퇴출 등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

○ 우수 RPC를 중심으로 시·군단위 이상 광역화 통합 촉진

- 통합 RPC에 대해서는 운영자금, 경영컨설팅, 건조·저장시설·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및 세제 지원 추진

○ RPC가 수탁판매 형태로 쌀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
- 금년부터 RPC 자체매입량의 10% 수준(70만석) 수탁판매 추진

○ RPC 운영자금과 벼 매입자금을 통합, 벼 매입 의무 준수사항 강화

- 지원액 1.5배 이상 연간 매입 → 지원액 1.5배 이상 수확기에 매입

□ '05년 새로 도입한 공공비축제를 보완하고 포대벼 매입 우선

지급금은 수확기 이전인 7월중에 발표

□ 생산자 스스로의 소비촉진 홍보를 위해 쌀 자조금제도 도입 검토

○ 도입 시기, 의무·임의 자조금 여부 등에 대한 농업계 협의시

“쌀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(가칭)” 제정 추진

□ 쌀 수급관리를 위해 6월까지 쌀 관측제도를 도입하고, 생산

조정제, 타작물 재배 지원도 검토

(2) 과수산업 보완대책

- 규모화된 품목별 마케팅 조직 육성을 위한 권역별 거점 산지 유통센터(APC) 육성으로 과일 생산·유통을 계열화
- 신선편이(Fresh-cut) 농산물 가공시설(세척, 절단 등) 지원
 - '06년 상반기에 선진국 사례조사 및 연구용역을 거쳐 추진
- 과실 대표브랜드 육성을 위해 FTA기금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·유통에 필요한 사업을 맞춤형 지원('06부터 33억원 지원)

(3) 축산업 보완대책

- 성공가능성 있는 80개 내외의 한우·돼지 브랜드 경영체를 선정('05까지 49개 선정), 규모화·마케팅 등 집중 지원
- 소비자단체 주관의 브랜드 인증 확대('05 : 18개 → '06 : 25)
- 생산에서 소비까지 유통 투명성 및 안전성 강화
 - 쇠고기 이력추적제 조기 확대시행(전면 시행시기 : '09년 → '08)
 - '06년부터 돼지 사육단계 위해요소중점관리제(HACCP) 시범 적용, 한우·젓소('07), 닭('08) 등으로 단계적 확대

◇ 단기 보완대책 중 예산, 세제 관련 부분은 중기재정계획, '07년 예산편성 등과 연계하여 종합검토 후 반영 추진

- ◆ DDA 협상, 한·미 FTA 협상 등 여건변화와 국가경제의 큰 틀에서 농업·농촌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
- 참여정부 농정의 기본틀로서 시행 3년째를 맞는 농업·농촌 종합대책의 점검·평가와 연계하고 투융자 효율성도 제고

가 검토 기본방향

- 개방확대 대비, 도·농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득·농촌대책을 대폭 강화하고 농정체계를 농가유형별 맞춤형 체제로 전환
 - ① 농업정책 :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심화에 대비,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농축산물 파워 브랜드 육성
 - ② 소득정책 : 농업내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업농의 경영안정장치 마련, 고령 중소농의 사회안전망 확충 등 지원 차별화
 - ③ 농촌정책 : 국가 균형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‘복합생활공간’으로 조성
- 농업계,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면서 대책 수립 추진

나 주요 점검 분야(예시)

① 농정여건 분석 및 장기비전 재조정

- 국가경제 발전의 전망 속에서 농업·농촌 위치 재정립
 - 국민소득증가, 고령화 저출산 사회, 양극화 문제도 함께 검토
 - * 국가전체 경제 발전전망과 관계부처 장기정책과 연계 검토
- 한·미 FTA협상, DDA협상에 따른 농업분야 영향 분석
- 농업·농촌의 장기비전 설정 및 로드맵 작성

② 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정제도 개선분야

- 농가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농정시스템 구축방안
- 농가등록제 도입과 중장기 직접지불제 발전방안 검토
- 농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전문 농업경영체 활성화방안
-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소득보조 방안
 -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민간자금 등을 활용한 ‘(가칭)농촌 사회 안정 기금’ 설치방안 검토
-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현금 대신 식료구매권(food stamp)으로 전환하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 검토
- 농협중앙회 신용·경제 사업 분리 및 품목별 전문조합 발전방안

③ 쌀산업 경쟁력 제고 등 식량정책 분야

- 양정제도(공공비축제, 쌀소득보전직불제) 보완 대책 및 RPC 등 쌀 민간유통기능 활성화 방안
-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및 증장기 종자산업 발전방안
- 증장기적 쌀수급전망 및 수급관리 대책

④ 농축산물 유통 효율화 및 안전성 관리 분야

- 농축산물 우수 브랜드 육성 및 산지유통주체 전문화·규모화 방안
- GAP, 이력추적제 등 농축산물 안전성 관리제도 발전방안 및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육성방안
- 시장지향적 농축산물 수급관리체계 발전방안

⑤ 농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분야

- 삶의질향상 대책의 실효성 제고 및 농촌교육·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도·농간 지식·정보 격차와 농촌 고령화 대응방안
- 도시민 유치를 위한 농촌 정주공간(농촌복합생활공간) 조성 및 1사 1촌운동, 농촌관광 활성화 등 도·농교류 내실화 방안
-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, 일원화 방안

◇ 금년말까지 종합대책을 점검·보완한다는 목표로 추진하되, 한·미 FTA, DDA 등 협상 동향을 보아가며 신속적으로 대응

□ 국회 보고로 쌀협상 비준 후속조치 차원의 대책 마무리

- 농림부에서 2월중 서면으로 국회에 보고

□ 농업·농촌 종합대책 점검 및 조정 추진체제 정비

- 농림부 종합대책 점검 특별T/F를 구성·운영하고 농업인 단체, 전문가와의 실무협의, 워크숍 등 진행
- 국무조정실, 재경부, 기획예산처가 참여하는 관계부처협의회에 참여부처를 확대하여 범정부차원의 T/F로 확대 개편
- 관계부처, 농업인단체, 학계 등이 참여하는 119조 투융자계획 평가협의회(가칭) 구성·운영, 정책 연구용역 병행 추진

* 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, 정책연구용역 방안 결정시 농업인 의견 적극 반영

□ 향후 추진일정

〈정부 실무초안 마련 단계〉 : 3월~8월

- 농림부 종합대책 점검 T/F, 관계부처 T/F, 평가협의회 등을 통하여 119조 투융자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
- 정책연구용역 추진으로 중장기 농업·농촌의 여건 변화와 DDA·FTA 진행 상황에 따른 국내농업 영향 분석
- 농업·농촌의 비전 재조정 및 종합대책 조정(안) 마련

〈정부초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단계〉 : 9월~10월

- 시·도별 지역순회 공개 토론회, 공청회, 여론조사 등을 통해 홍보와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
- 주요 농업인단체와 간담회, 워크숍 등을 수시 개최하여 농업계 의견을 수렴, 국민적 공감대 형성

〈종합대책 보완작업 마무리 단계〉 : 11월~12월

- 점검·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대책과 투융자계획 조정
- 농업계, 관계부처, 국회와의 협의 및 대책 확정
-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체계적 홍보 추진

※ 정부-국회-농민의 3자 협의기구가 구성·운영되면 농업·농촌 문제를 보다 폭넓게 검토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책을 논의하는 장이 되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